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 모색



일시 | 2024년 7월 16일(화)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 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국회 사회혁신포럼
공동주최 김태년, 이학영, 진선미, 김영배, 용혜인, 위성곤, 이해식, 허영, 황명선 의원
주 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29개 전국 및 지역 연합체 / 25개 단체)
공동주관 사회적경제활성화_전국네트워크, 서울자치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연대회의
후 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목 차

□ 개요	1
□ 환영사	2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전국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2
▪ 김영배 국회 사회혁신포럼 대표의원	4
▪ 김경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6
□ 인사말	7
▪ 이학영 국회 부의장	7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9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
▪ 허 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
▪ 이의영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15
□ 축사	16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6
▪ 김미경 전국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장	17
□ 발제	18
▪ 발제 1.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와 예산삭감이 미친 영향 분석	18
▪ 발제 2. 사회적경제 전달체계의 변화와 문제점	32
□ 현장의 목소리	40
▪ 탄탄주택협동조합 활동사례	41
▪ (주)더공감 예비사회적기업	46
▪ '24년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에 따른 경기도 현황	48
□ 토론	51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52
▪ 고용노동부	57
▪ 기획재정부	58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 모색

□ 배경 및 필요

- 윤석열 정부의 급격한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와 예산 삭감이 현장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개 요

- 일시·장소 : 2024년 7월 16일(화)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 최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국회 사회혁신포럼
- 공동주최 : 김태년, 이학영, 진선미, 김영배, 용혜인, 위성곤, 이해식, 허영, 황명선 의원
- 주 관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29개 전국 및 지역 연합체 / 25개 단체)
- 공동주관 : 사회적경제활성화_전국네트워크, 서울자치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연대회의
- 후 원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비고
	접수	접수 및 참석자 간 인사	
14:00~ 14:20	개회 및 기념촬영	환영사 :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장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김경민 상임대표 인사말 : 공동주최 의원 중 참석 의원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이의영 공동대표 기념촬영	
14:20~ 14:50	발제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와 예산 삭감이 미친 영향분석 (지자체의 예산변화와 25년 예산편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 김기태 소장	15분
		사회적경제 정책전달체계의 변화와 문제점 전)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사협)살림 윤봉란 이사장	15분
14:50~ 15:11	현장의 목소리	탄탄협동조합 문영록 조합원(전 사회주택협회 상임이사) (주)더공감 이경재 대표이사(예비사회적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김홍길 과장	각 7분
15:11~ 15:22	토론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김대훈 사무총장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 최상운 과장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임세희 과장	각 7분
15:22~ 15:30	마무리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사회적
경제인 여러분,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위원님들께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박찬대 원내대표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참 많은 의원님과 단체가 함께 토론회를 준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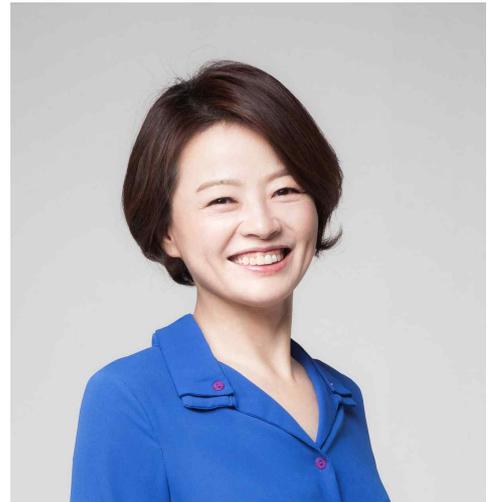
했습니다. 그 만큼 사회적경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국회 사회혁신포럼 김영배 대표님과 이학영 국회 부의장님, 용혜인 대표님, 김태
년·위성곤·이해식·허영·황명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관해 주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김경민 상임대표님과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
네트워크 이의영 공동대표님, 서울자치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연대회의, 후원을 해주신 전국 사
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김미경 회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UN이 작년 4월 사회적 경제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기구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경제 관련 조식을 축소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반
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해 온 사회적경제 시스템이 조금씩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경제인들이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기태 소장님, 윤봉란 위원장님,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문영록 조합원
님, 이경재 대표이사님, 김홍길 과장님 감사합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김대훈 사무총장님, 최상



진선미(서울 강동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운 과장님, 임세희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라 현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공유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바로잡는 기회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늘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안녕하세요. 성북갑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지난해 다보스포럼(WEF)의 키워드는 바로 ‘다중위기’였습니다. 기후위기, 사회결속력 약화 및 양극화 등 인류가 장단기적으로 맞이할 위험요인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다중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중위기’ 시대의 문제는 각각의 문제들이 상호연계되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의 심각성과 파급력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상호연계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는 ‘사회적경제’를 포함한 사회혁신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고안해왔습니다. 위기의 시대야말로 상호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경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비서관 직제 폐지’를 시작으로, 각 분야의 사회적경제 예산들은 삭감되고 정책들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중요한 때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축소’ 행보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리는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가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 소장님과 윤봉란 前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공동대표님의 현재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에 대한 진단을 시작으로, 문영록 탄탄협동조합 조합원님과 이경재 더공감 대표이사님, 김홍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님, 기획재정부 최상운 과장님, 고용노동부 임세희 과장님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고견으로 채워주실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남깁니다.

다중위기 시대에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타심과 호혜성, 협동심에 기반한 융합적이고 협력적인 접근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축소한 사회적경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를 기획해주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영배(서울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회혁신포럼 대표의원>

환영사

반갑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김경민입니다. 정부에 의해 사회적경제가 폄하되는 것을 넘어 폄훼되고 있기에 더욱 어려운 지금입니다. 그럼에도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걸음을 뚝뚝 걸으며, 지금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환영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함께하며 제도적/정책적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나서주신 진선미 의원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전국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김영배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사회혁신포럼, 그리고 공동주최로 함께해 주신 김태년 의원님, 이학영 부의장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 허영 의원님, 황명선 의원님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4년 정당 중 최초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 권성동/김상훈/윤영석 의원을 포함 67인이 동의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최초로 발의합니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은 세계가 주목하는 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이 심각한 양극화로 공동체 붕괴 위기에 놓여 있음을 직시한다는 것과 해결을 위해 한국경제의 체제 개혁이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국가의 복지 및 자유시장경제 기반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기대함을 밝힙니다.

당시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통해 준비되어 발의된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의미는, 지금 UN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회원국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2012년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가 함께하며 출범했습니다. 2006년 출범하여 활동한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2011년부터 활동한 <협동조합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통합하며 탄생한 것입니다. 연대회의는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적기업법이 준비되어 이명박 정부에서 육성법으로 제정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청와대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두고 각 부처를 총괄한 문재인 정부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 경 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지금 사회적경제는 어떤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 했던 예산삭감과 정책의 뒷 걸음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수진보를 떠나 왜 이런 정부는 한 번도 없었을까요? 일자리 등 사회문제 해결 및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에 일정 성과를 낸 것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와 UN이 동일하게 관심을 가졌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성과와 가능성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초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UN 등 전 세계가 관심 갖는 사회적경제의 선봉에 서지 못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부터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어 지금까지 유지하는 유일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에 민주당이 위원장이었던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상정되었음에도 왜 통과시키지 않았는지,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 지금의 사회적경제 현장의 편하와 사회적경제 편혜를 최소한으로 막지 못 한 것은 아닌지 곰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이 22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최고위원회에 자리시켰습니다. 고무적입니다. 지속가능한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것에 사회적경제가 중요하며 기본소득당으로서 정치적 지향을 명확히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 현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UN은 2015년 지속가능발전(SGDs) 이행 수단으로 '사회적경제 활용'을 명시하고, 작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물론이고, 내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였습니다.

2025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준비하며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10여년 동안 부족한 예산 하에서도 효과적인 성과를 만들며 다져온 지역 중심 전달체계를 붕괴시킨 윤석열 정부는 그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 작년 4월 UN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에 동의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 오늘의 정책토론회가 이행함에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관 및 후원 등으로 수고해 주신 이의영 이사장님과 운영위원장이신 한국 YWCA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사회적경제활성화_전국네트워크 관계자, 서울자치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연대회의, 김미경 회장님(은평구청장)을 비롯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 등 사회적경제를 위해 함께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부의장 이학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 모색’
국회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국회 사회혁신포럼과 소속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사회적
경제활성화_전국네트워크, 전국사회적경제광역지원센터협의
회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
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정부의 손길이 미치
지 않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4년 협동조합 예산을 79%, 사회적기업 70%, 마을기업 59%를
삭감하면서 사회적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현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삭감은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와의 매칭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비합리적인 예산 삭감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속가능성과 자생력을 위협하
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의 활동 의지마저 꺾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
적경제기업은 단순한 경제 모델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깊이 이해하
고,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 부의장으로서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굳게 믿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태년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국회 사회혁신 포럼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코로나 위기로 세계는 새로운 복합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치솟는 물가, 높은 실업률로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UN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하고, 2025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세계는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시대를 역행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재도약을 위해 역할을 효율화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지원센터 폐지와 행정 부서 통폐합·예산삭감으로 사회적경제의 정책 환경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개최된 토론회가 참 시의적절합니다. 사회적경제 전문가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주신 만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하여, 사회적경제가 더 탄탄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귀 기울여 듣고, 정책 제안과 예산 확보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국회 사회혁신포럼, 동료 선배 의원님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를 비롯한 사회적경제 유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를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경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관련 정책을 거의 없애다시피 한 그 후폭풍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은 중앙정부 문제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이 중앙과 지방정부 매칭 형태로 집행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 삭감은 지방정부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산 수립 시점의 차이로 지역의 피해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걱정이 앞섭니다.

예산 삭감으로 발생한 큰 변화 중 하나가 중간지원조직 붕괴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 핵심 주체인 당사자와 행정, 주요 이해관계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현장에는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당 지도부 선거로 전국을 돌 때 각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인 간담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즘 많이 참석하는 각종 토론회, 포럼, 행사 등에서도 역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많이 다니다 보니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선 하나같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함께 얘기하다 보면 서로를 북돋우며 다시 힘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토론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은 많이 어렵지만 이 자리를 통해 서로를 북돋우고, 다시 힘을 얻고, 새로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본소득당과 저도 사회적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기업인·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자본주의의 한계가 가진 사각지대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며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는 더불어 성장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정책이 급격히 축소되고 예산이 삭감된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변화는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으며, 지역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기조를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정책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지켜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 사 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국회의원 이해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김태년·이학영·진선미·김영배·용혜인·위성곤·허영·황명선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가 심화된 대한민국에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며 사회통합의 기반을 형성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OECD와 EU는 사회적경제 관련 권고안과 실행계획

을 마련했고, UN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국제기구들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흐름에 역행하듯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대한민국의 사회적경제계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관련 조식을 축소하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중단 및 사회적경제 발굴육성 정책 대폭 축소도 모자라 급기야 관련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정적 정책방향은 지방정부와 현장으로 스노우볼이 되어 결국 사회의 안전망을 위해 현장을 밤낮으로 뛰며 지켜온 중간지원조직 활동가가 사라지게 되고, 앞으로 새로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설립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토론회가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사회적경제 분야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 김기태 소장님과 전)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윤봉란 위원장님,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이경재 대표이사님과 김홍길 과장님의 소중한 고견 경청하겠습니다. 김대훈 사무총장님과 최상운 과장님, 임세희 과장님의 활발한 토론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서울 강동(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국회 사회혁신포럼 등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토론회를 함께 개최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논의를 위해 꼼꼼하게 토론회를 준비하여 주신 한국 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그리고 전국사회적경제광역지원센터협의회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도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회적경제는 자본보다 사람을 우선한다는 신념 아래 고용창출, 부가가치 창출 등 기존 경제활동의 물적 성과를 넘어 연대와 포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왔습니다. 특히 점차 축소되어 가는 공동체와는 반대로 커져만 가는 부의 양극화 시대를 지나며,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의 문화를 만들고 사회적 위기와 취약지대를 자생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동력을 뒷받침해 줄 정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무려 56.6%인 6,332억 원이나 삭감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정책의 연속성을 무시하며 전 정부 지우기에만 매몰되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급격한 정책변화와 예산삭감이 끼친 영향을 확인하고 앞으로 사회적경제가 나아가야 할 정책적인 방향성 정립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안전망을 하루빨리 재구축하는 것은 물론, 무한경쟁 사회를 극복하고 이웃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사회적기업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경제가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압니다. 현장의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고충과 제언을 경청해서 정책적 대안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국회에서 관철해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모든 분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희망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 황명선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 지역 소멸, 고용 불안,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들은 기존의 시장경제 논리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대응할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사회적경제'뿐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도 통합니다. 구성원들이 개인의 이익과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며,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 소통과 연대를 통한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시합니다. 이런 사회적경제의 민주성·상호성·연대성 원리가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19대·20대·21대에 걸쳐 사회적경제 관련 통합적인 기본법을 여야 양쪽에서 발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모두 임기만료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사회적경제 관련 국정 과제와 예산 규모 등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동안의 개정법들을 종합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받아 지난 11일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기본법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중요한 과제들도 많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창의적 모델 개발, 복지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청년층과의 연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진지한 논의의 장이 계속해서 마련돼야 합니다.



황명선(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오늘 귀중한 발제를 맡아주신 김기태 소장님과 윤봉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토론자와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가 더 이상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꽃피우는 데 이 토론회가 큰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온 힘을 다해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의영입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2011년 말 이명박정부에서 만들어진 민·관거버넌스 조직으로서,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의 관계부처와 기업,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조직 당사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보수정권의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을 다루는 회의에서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지시했다”는 2023년 6월의 언론 보도이후, 그동안 정부정책의 주요 파트너였던 노조,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정부와 대척점에 서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조직의 목표를 사회적 가치에 두며 혁신적 운영으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고용하는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의 정책방향과 내용은, 저출산·고령화로 대한민국의 소멸까지 우려되는 이 시기에는 더욱더 전면 재검토, 수정되어야 합니다. 유엔에서는 지난 2023년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했고, 사회적경제조직 당사자들도 2023 사회적기업 세계포럼 주간에 ‘Buy Social Europe B2B’를 공식 출범시켜 17개국의 23개 조직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초국가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결의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대하는데, 우리 정부만 뒤로 돌아선 상황이라 안타깝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를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반갑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토론내용과 결과가 새롭게 출발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제도와 법으로 결실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최로 힘을 실어주시는 김태년, 이학영, 용혜인 의원 등 사회적경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과 주최, 주관, 후원해 주시는 많은 단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하시는 시민사회, 사회적경제활동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나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이의영 공동대표
사회적경제활성화_전국네트워크
(경실련 공동대표)

축사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 준비에 애쓰신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진선미 위원장님, 국회 사회혁신포럼을 이끄시는 김영배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김경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회적경제는 국가와 시장 모두의 실패를 경험하며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UN과 OECD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ESG를 통해 많은 기업의 주요 목표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비서관실을 대통령실에 설치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과 인력 및 관련 사업들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했습니다. 특히, 2024년 예산 편성에 있어 관련 예산 75% 삭감이라는 충격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런 정부의 급격한 정책변화로 오랜 시간 걸쳐 자라온 국내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소멸위기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위협받는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되찾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훌륭한 제안들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축 사

사회적 경제를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은평구청장 김미경입니다.

<사회적 경제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 현장 관계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그동안 열정을 다해 현장에서 뛰어오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진선미 위원장님과
국회 사회혁신포럼 김영배 대표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
립니다.

오랜 시간 사회적 경제는 지역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에 든
든한 뒷받침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의 정책환경 변화로 공들여 쌓아온 성과들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예산삭감, 그리고 조직 축소로 현장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의 시기에 국회가 사회적 경제 현장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어주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변화가 초래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면 좋겠습
니다.

사회적 경제가 지역과 민생을 돌보는 훈풍이 되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지방정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미 경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서울 은평구청장)



발제문 1.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와 예산 삭감이 미친 영향분석

(지자체의 예산변화와 25년 예산편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 김기태 소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정지영 소장

1. 중앙정부 정책 변화가 지방정부 예산과 현장에 미치는 영향

- 대부분의 중앙정부는 기존에 이미 수행되는 사업과 예산은 가급적 축소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음. 특히 법에 따른 정책과 사업예산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시킴으로써 정부에 대한 우호도를 높이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음
- 하지만 현 정부는 사회적경제 예산을 상당한 수준으로 삭감하였는데, 이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음. 상당한 불신 혹은 축소 의지를 가질 때에만 관련 사업예산을 축소할 수 있음.
- 2024년 예산안은 현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균형재정을 위한 예산도 아니었음. 2024년 예산안 총액은 656.9조원으로 2023년의 638.7조원에 비해 2.8% 증가한 것으로 총수입이 줄어들어 기재부의 자료에서도 통합재정수지에서 44.8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상하였음.
- 정부의 순재정상황을 더 잘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

표 30 정부 재정수지 전망(2024년)

(단위: 조원, %)

	'23년 예산 (A)	'24년(안) (B)	증감(B-A)
◇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13.1 (△0.6%)	△44.8 (△1.9%)	△31.7 (△1.3%p)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58.2 (△2.6%)	△92.0 (△3.9%)	△33.8 (△1.3%p)
◇ 국가채무 (GDP 대비)	1,134.4 (50.4%)	1,196.2 (51.0%)	+61.8 (+0.6%p)

자료 : 기재부(2023), "2024년 예산안"

- 중앙정부가 사회적경제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면 지방정부 및 현장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체감하게 됨.
 - 중앙정부 예산 축소 → 지방정부 매칭 예산 축소 + 자체 예산 축소 → 현장 보조사업 지원금 축소 → 단기적 경영수지 악화 및 관련 사업 축소 → 사회적경제 민간 의욕 저하
 - 예산 축소 → 중간지원조직 전문인력 고용 축소 및 조성 사업 감소 → 현장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체계 붕괴 → 사회적경제 진입 약화 및 생태계 약화
 - 예산 축소 → 관련 공공기관에 부정적 신호 제공 → 공공조달 및 거버넌스 구조 약화 → 사회적경제기업 추가 부담 발생(영업, 판로 약화 등)
- 이 글에서는 이런 경로 중 지방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함

2. 중앙부처 사회적경제 예산 변동

- '24년 사회적경제 예산안은 4,899억원으로 작년 대비 56.3% 감소. 일부 국회 의결에서 상향되었으나 (기재부협동조합, 고용부 등) 정보 파악이 어려워 예산안만을 가지고 분석함

표 31 중앙부처별 사회적경제 사업예산안 편성 현황(2024)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부문	2023	2024	'23-'24	
					증감액	증감률
기재부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7,500	780	-6,720	-89.6%
교육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500	0	-500	-100.0%
과기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	1,272	636	-636	-50.0%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	사업	6,995	2,695	-4,300	-61.5%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사업	3,500	0	-3,500	-100.0%
문체부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 지원	사업	6,968	0	-6,968	-100.0%
	문화재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0	500	500	신규
농식품부	농촌돌봄농장 지원	사업	4,466	4,368	-98	-2.2%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사업	1,386	1,386	0	0.0%
	농업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사업	4,350	4,180	-170	-3.9%
산림청	산림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	650	0	-650	-100.0%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사업	3,900	0	-3,900	-100.0%
	신품종 생명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	사업	4,000	0	-4,000	-100.0%
산업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	21,000	9,440	-11,560	-55.0%
중기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지원	사업	2,560	2,560	0	0.0%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12,600	12,600	0	0.0%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	사업	4,851	4,851	0	0.0%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수지차보조)	사업	17,031	16,480	-551	-3.2%
	소셜벤처 육성	사업	2,000	0	-2,000	-100.0%
환경부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	1,300	0	-1,300	-100.0%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지원)	사업	93,880	28,589	-65,291	-69.5%
	사회적기업육성(지특)	사업	103,377	47,665	-55,712	-53.9%
	사회적기업육성(제주)	사업	4,937	2,370	-2,567	-52.0%
여가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지원	사업	230	0	-230	-100.0%
소계			309,253	139,100	-170,153	-55.0%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보증사업	금융	150,000	0	-150,000	-100.0%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대출지원	금융	10,000	0	-10,000	-100.0%
	사회투자펀드 조성 및 운영	금융	300,800	0	-300,800	-100.0%
중기부	소셜임팩트 보증	금융	265,800	265,800	0	0.0%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금융	70,000	70,000	0	0.0%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금융	15,000	15,000	0	0.0%
소계			811,600	350,800	-460,800	-56.8%
합계			1,120,853	489,900	-630,953	-56.3%

자료 : 2024년 중앙부처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

- 행안부 사회적경제협업체계 구축사업이나 산업부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타운 등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을 지향하는 사업들이 크게 삭감되었음.
- 특히 고용부의 사회적기업 신규 인증 시 재정지원 예산과 행안부의 마을기업 신규 선정 사업이 사라져, 새로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에 심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었음.
- 금융위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사업과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지원 사업, 사회투자펀드 등의 금융 지원은 전액 삭감되어, 자생적인 사회적기업 성장이란 정부의 정책 방침이 구두선이란 점을 보여주고 있음.
-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예산을 추출한 것이므로 표면적으로 '사회적경제'를 명시하지 않거나 사업명을 변경한 예산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음. 향후 예산안 및 확정예산에 대한 정보를 국회와 민간이 공유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되도록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

3.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예산 변동

가. 사회적경제 예산 총괄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에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농업', '소셜벤처', '공정무역'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추출하여 정리
- 사회적경제 관련 지방정부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이미 2023년 예산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표 32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사회적경제 예산 변화(2019~2024)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2-'23		'23-'24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광역	합계	320,665	330,105	338,072	311,203	195,048	-26,869	-7.9%	-116,154	-37.3%
	평균	18,863	19,418	19,887	18,306	11,473	-1,581		-6,833	
기초	합계	266,006	257,970	314,771	303,932	141,136	-10,839	-3.4%	-162,796	-53.6%
	평균	1,177	1,141	1,393	1,345	624	-48		-720	

- 광역 예산 합계는 '20년 3,207억원에서 '22년 3,381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 2023년 광역은 7.9% 감소하였고, 기초는 3.4% 감소하였음.
-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예산이 감소한 '24년에는 광역 예산이 1,950억원으로 269억이 감소하여 37.3%가 줄어들었음.
- 광역 지자체 평균 예산 : ('23) 183억원 → ('24) 115억원 (△37.3%)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 2022년 3,148억에서 2023년 3,039억원으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던 기초 예산은 2024년 1,411억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53.6%가 감소하여 절반 이상 줄었음.
- 기초 지자체 평균 예산 : ('23) 13억원 → ('24) 6억원 (△53.6%)

나. 시도별 예산 변화

□ 22~23년 예산 변화

- 전년도 3월에 기본 방향이 잡히는 중앙정부 예산의 편성 구조로 인해 대통령이 바뀌어도 실재는 3년차부터 예산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임. 2024년은 그런 의미에서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각이 잘 드러난 예산임
- 반면 지방정부 예산안의 기본 구조는 전년도 하반기에 정해지기 때문에 신임 지자체장의 정책방향이 2년차 예산에 바로 반영될 수 있음. 2022년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의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많이 당선된 결과 2023년 예산부터 사회적경제 예산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음

표 33 광역 지자체 사회적경제 예산 변화¹ : '22년 대비 '23년 증감

단위 : 백만원

광역	2021	2022	2023	'22-'23		증감률 순위
				증감액	증감률	
경기	27,194	28,531	41,926	13,395	46.9%	1
충남	18,614	19,129	26,821	7,691	40.2%	2
대전	23,090	26,136	35,946	9,810	37.5%	3
광주	11,704	12,634	15,720	3,086	24.4%	4
충북	7,219	8,023	9,419	1,396	17.4%	5
강원	12,416	23,025	26,727	3,701	16.1%	6
전남	12,882	13,774	14,705	931	6.8%	7
인천	10,056	10,940	11,363	423	3.9%	8
제주	8,775	10,279	10,417	138	1.3%	9
세종	4,501	4,276	4,119	-158	-3.7%	10
부산	13,353	15,018	14,315	-702	-4.7%	11
울산	7,849	8,443	8,018	-425	-5.0%	12
경북	26,444	25,130	22,827	-2,304	-9.2%	13
서울	58,839	38,664	24,032	-14,633	-37.8%	14
대구	25,012	24,849	15,080	-9,769	-39.3%	15
전북	29,985	36,310	20,447	-15,863	-43.7%	16
경남	32,171	32,909	9,321	-23,588	-71.7%	17
합계	330,105	338,072	311,203	-26,869	-7.9%	-
평균	19,418	19,887	18,306	-1,581	-7.9%	-

- 이런 가설이 현실에 잘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광역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추이를 더 상세히 보기 위해 시도를 구분하여 비교하여 보았음.
- 22년에 비해 23년 사경예산이 증가된 시도는 경기, 충남, 대전, 광주임. 경기는 23년 419억 원 예산을 편성하여 22년에 비해 46.9%가 증가하였음. 2위는 충남으로 40.2%, 3위 대전은

37.5%가 증가하였음.

- 반면 23년 사경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든 곳도 대략 40% 수준으로 나타남. 경남이 22년 329억원에서 23년 93억원으로 71.7% 삭감되었고, 2위 전북은 43.7%, 3위 대구는 39.3%가 줄어들었음.
- 서울은 22년 386억원에서 23년 240억원으로 37.8%가 줄어 들었는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이미 2022년에 사경예산 삭감이 이뤄졌음. 21년 588억원이었던 사경예산은 22년 386억원으로 202억원을 삭감하여 34.3% 감소하였음.
- 서울과 경남은 소속 정당이 다른 지자체장으로 교체되어 사회적경제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음. 반면 충남과 대전은 소속 정당이 다른 지자체장으로 교체되어도 사회적경제 예산이 상당히 증가하였음. 마찬가지로 대구와 전북은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사경예산이 40% 정도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음. 정당과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상관관계도 있지만, 지자체장 개인의 판단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북은 2023년 예산이 크게 감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이며, 광주도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치에 미치지 못함.

□ 23~24년 예산 변화

표 34 광역 지자체 사회적경제 예산 변화2 : '23년 대비 '24년 증감

단위 : 백만원

광역	2022	2023	2024	'23-'24		증감률 순위
				증감액	증감률	
경기	28,531	41,926	39,225	-2,701	-6.4%	1
대전	26,136	35,946	29,536	-6,410	-17.8%	2
광주	12,634	15,720	12,596	-3,124	-19.9%	3
충남	19,129	26,821	21,426	-5,394	-20.1%	4
제주	10,279	10,417	7,815	-2,602	-25.0%	5
전남	13,774	14,705	9,239	-5,466	-37.2%	6
세종	4,276	4,119	2,518	-1,601	-38.9%	7
서울	38,664	24,032	14,567	-9,464	-39.4%	8
경남	32,909	9,321	5,642	-3,679	-39.5%	9
전북	36,310	20,447	11,312	-9,135	-44.7%	10
인천	10,940	11,363	6,079	-5,284	-46.5%	11
부산	15,018	14,315	6,535	-7,781	-54.4%	12
경북	25,130	22,827	9,337	-13,490	-59.1%	13
대구	24,849	15,080	5,292	-9,788	-64.9%	14
울산	8,443	8,018	2,599	-5,419	-67.6%	15
강원	23,025	26,727	8,604	-18,123	-67.8%	16
충북	8,023	9,419	2,727	-6,692	-71.1%	17
합계	338,072	311,203	195,048	-116,154	-37.3%	-
평균	19,887	18,306	11,473	-6,833	-37.3%	-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 23년에 비해 24년도 예산은 광역 전체적으로 37.3% 감소하였고. 시도별 큰 차이가 남.
- 감소율이 가장 낮은 상위 4개 시군은 경기, 대전, 광주, 충남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경기의 감소율은 6.4%에 불과했음. 반면 충북, 강원, 울산, 대구는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는데, 충북은 71.1%나 사경 예산이 줄어들었음.
- 중앙정부 예산 축소는 중앙정부 예산과 매칭되어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도 함께 줄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음. 하지만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차는 더욱 잘 드러나고 있음.

□ 22년 대비 24년 예산 변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변화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22년 대비 24년 예산액 증감을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음.
- 경기, 대전, 충남, 광주가 22년에 비해 거의 같거나 오히려 증가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전북, 울산, 대구, 경남은 3분의 2 이상이 감소하였음. 특히 경남은 82.9%, 대구는 78.7%가 감소하여 22년 예산에 비해 2년만에 80% 정도 감소하여 현장 사회적경제기업이 대비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식으로 정책과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의 자생력 강화를 운운하는 것은 현장을 의도적으로 모멸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음.

표 35 광역 지자체 사회적경제 예산 변화3 : '22년 대비 '24년 증감

단위 : 백만원

광역	2020	2022	2024	'22-'24		증감률 순위
				증감액	증감률	
경기	41,200	28,531	39,225	10,693	37.5%	1
대전	16,890	26,136	29,536	3,401	13.0%	2
충남	8,314	19,129	21,426	2,297	12.0%	3
광주	11,629	12,634	12,596	-38	-0.3%	4
제주	8,763	10,279	7,815	-2,464	-24.0%	5
전남	12,065	13,774	9,239	-4,535	-32.9%	6
세종	3,884	4,276	2,518	-1,758	-41.1%	7
인천	9,423	10,940	6,079	-4,861	-44.4%	8
부산	12,705	15,018	6,535	-8,483	-56.5%	9
서울	65,049	38,664	14,567	-24,097	-62.3%	10
강원	10,856	23,025	8,604	-14,421	-62.6%	11
경북	31,597	25,130	9,337	-15,793	-62.8%	12
충북	6,636	8,023	2,727	-5,296	-66.0%	13
전북	28,754	36,310	11,312	-24,998	-68.8%	14
울산	8,394	8,443	2,599	-5,844	-69.2%	15
대구	19,007	24,849	5,292	-19,557	-78.7%	16
경남	25,499	32,909	5,642	-27,268	-82.9%	17
합계	320,665	338,072	195,048	-143,024	-24.0%	-
평균	18,863	19,887	11,473	-8,413	-24.0%	-

다. 자원별 예산 변화

- 지방정부의 예산은 상급 정부의 매칭사업에 들어가는 예산과 자체사업 예산이 합하여 편성됨.
- 지자체 전체 사업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수록 지방정부가 자체사업을 활발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국비 비중이 높을수록 중앙정부의 위탁사업을 단순수행한다고 이해할 수 있음.
- 광역의 국비 비중은 23년 55.1%에서 24년 35.2%로 거의 20%p 급격히 줄어들었음. 반면에 시도비의 비중은 43.5%에서 61.6%로 크게 증가하였음. 중앙정부의 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시도에서 이를 벌충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6 광역&기초 사회적경제 예산 자원별 변화(2020~2024)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2-'23		'23-'24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시도	합계	합계	320,665	330,105	338,072	311,203	195,048	-26,869	-7.9%	-116,154	-37.3%
		국비	158,617	174,578	181,294	171,319	68,736	-9,974	-5.5%	-102,584	-59.9%
		시도비	158,414	151,438	152,266	135,305	120,074	-16,962	-11.1%	-15,230	-11.3%
		기타	3,634	4,088	4,512	4,579	6,238	66	1.5%	1,660	36.2%
	평균	합계	15,539	18,863	19,418	19,887	18,306	11,473	-1,581	-7.9%	-6,833
		국비	8,359	9,330	10,269	10,664	10,078	4,043	-587	-5.5%	-6,034
		시도비	7,162	9,318	8,908	8,957	7,959	7,063	-998	-11.1%	-896
		기타	18	214	240	265	269	367	4	1.5%	98
	비중	국비	49.5%	52.9%	53.6%	55.1%	35.2%	-	-	-	-
		시도비	49.4%	45.9%	45.0%	43.5%	61.6%	-	-	-	-
		기타	1.1%	1.2%	1.3%	1.5%	3.2%	-	-	-	-
	시군구	합계	합계	266,006	257,970	314,771	303,932	141,136	-10,839	-3.4%	-162,796
국비			131,504	125,873	133,009	133,810	46,988	801	0.6%	-86,822	-64.9%
시도비			42,293	37,413	35,054	33,878	17,228	-1,176	-3.4%	-16,649	-49.1%
시군구비			91,790	94,485	146,432	135,993	76,919	-10,439	-7.1%	-59,074	-43.4%
기타			418	200	276	251	0	-25	-9.2%	-251	-
평균		합계	1,310	1,177	1,141	1,393	1,345	624	-48	-3.4%	-720
		국비	543	582	557	589	592	208	4	0.6%	-384
		시도비	172	187	166	155	150	76	-5	-3.4%	-74
		시군구비	592	406	418	648	602	340	-46	-7.1%	-261
비중		국비	49.4%	48.8%	42.3%	44.0%	33.3%	-	-	-	-
		시도비	15.9%	14.5%	11.1%	11.1%	12.2%	-	-	-	-
		시군구비	34.5%	36.6%	46.5%	44.7%	54.5%	-	-	-	-
	기타	0.2%	0.1%	0.1%	0.1%	0.0%	-	-	-	-	

- 이 시기 국비의 감소율은 59.9%이지만, 시도비의 감소율은 11.3%로 억제되었음.
- 기초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은 3천억원 규모에서 1,411억원으로 53.6%가 감소하였지만,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이 가운데 시군구비의 감소는 1,360억원에서 769억원으로 43.4%가 줄어드는 것에 머물렀음.

- 전체적으로 광역지자체 예산의 예산 감소가 가장 완만한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로는 광역단위에서 지방정부 예산을 운용하는 자율성이 높은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또한 기초지자체장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광역지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경우 기초지자체 자체사업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음. 특광역시는 더욱 심할 수 있음.

라. 매칭사업과 자체 사업의 비교

- 국비 또는 시도비가 매칭된 사업과 비매칭된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국비 매칭 사업의 비중이 60~70% 수준에 달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자체 예산은 20~30% 수준 정도임
- 따라서 중앙부처의 예산이 감소하면 국비와 연계된 지자체 예산의 축소도 불가피함 구조임. 하지만 국비가 줄어도, 자체사업이 많이 유지되거나, 국비사업이 없어지거나 축소된 것을 지방비로 메꾸는 경우 예산 감소가 상대적으로 완만해 짐.
- 중앙부처 예산이 감소하는 수준과 비례하여 지자체 예산이 감소하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로 자체 사업도 줄이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대응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칭사업과 자체사업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

표 37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사회적경제 매칭 및 자체 사업 예산 변화(2019~2024)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2-'23		'23-'24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시도	합계	320,665	330,105	338,072	311,203	195,048	-26,869	-7.9%	-116,154	-37.3%	
		국비 매칭	223,506	242,104	256,247	242,210	109,626	-14,037	-5.5%	-132,584	-54.7%
		자체	97,159	88,001	81,825	68,993	85,423	-12,832	-15.7%	16,430	23.8%
	평균	합계	18,863	19,418	19,887	18,306	11,473	-1,581	-7.9%	-6,833	-37.3%
		국비 매칭	13,147	14,241	15,073	14,248	6,449	-826	-5.5%	-7,799	-54.7%
		자체	5,715	5,177	4,813	4,058	5,025	-755	-15.7%	966	23.8%
	비중	국비 매칭	69.7%	73.3%	75.8%	77.8%	56.2%	-	-	-	-
		자체	30.3%	26.7%	24.2%	22.2%	43.8%	-	-	-	-
	시군구	합계	266,006	257,970	314,771	303,932	141,136	-10,839	-3.4%	-162,796	-53.6%
국비 매칭			199,757	185,749	193,230	190,112	70,936	-3,118	-1.6%	-119,176	-62.7%
시도비 매칭			27,246	22,004	23,996	17,611	21,078	-6,385	-26.6%	3,467	19.7%
자체			39,002	50,217	97,545	96,209	49,122	-1,336	-1.4%	-47,087	-48.9%
평균		합계	1,000	970	1,183	1,143	531	-41	-3.4%	-612	-53.6%
		국비 매칭	751	698	726	715	267	-12	-1.6%	-448	-62.7%
		시도비 매칭	102	83	90	66	79	-24	-26.6%	13	19.7%
		자체	147	189	367	362	185	-5	-1.4%	-177	-48.9%
비중		국비 매칭	75.1%	72.0%	61.4%	62.6%	50.3%	-	-	-	-
		시도비 매칭	10.2%	8.5%	7.6%	5.8%	14.9%	-	-	-	-
		자체	14.7%	19.5%	31.0%	31.7%	34.8%	-	-	-	-

- 시도 사경예산에서 국비매칭 사업예산의 비율은 23년 최대 77.8%로 조금씩 올라가다가 갑자기 24년 56.2%로 하락함. 반면 시도비 자체사업 예산 비율은 22.2%에서 43.8%로 증가함.
- 예산액도 국비 매칭 사업은 2,422억원에서 1,096억원으로 54.7%가 감소한 반면, 자체사업은 690억원에서 854억원으로 23.8%가 증가하였음.
- 광역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자체 사업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을 진행하였음. 이는 작년 사회적경제 예산복구 공동대응위원회에서 중앙정부 재정지원 예산복구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불가피할 경우 지방정부에서 대신 지원하라는 현장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기 때문으로 보임.
- 기초지방정부는 국비사업은 62.7%가 감축하였으며, 기초 자체 사업도 962억원에서 491억원으로 48.9%를 감축하였음. 반면 광역의 예산이 매칭되는 시도비 매칭사업은 오히려 176억에서 211억으로 19.7% 증가하였음.
-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이 기초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제공했으며, 기초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정책 의지를 축소시킨 것으로 보여짐.

4. 지자체장 소속 정당에 따른 사회적경제 예산 변화

- 지자체장이 사회적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정책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예산의 변동이 나타날 수 있음. 이 경우 개별 지자체장의 사회적경제 인식 정도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지자체장 소속 정당을 변수로 사용했음.
- 지자체장의 정책의지에 따른 사회적경제 예산 변화 양상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광역과 기초의 자체사업 예산만을 가지고 분석했음.
- 광역 예산은 현재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인 경우 '22년 대비 '24년 예산은 44.3% 감소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35.2%로 늘어났음. 즉,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시도는 자체 예산을 증액시켜, 중앙부처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려 노력했다고 할 수 있음.

표 38 광역 지자체장 소속 정당에 따른 자체 사업 예산 변화(2022~2024)

단위 : 백만원

소속 정당 (‘21→’22)	개수	2022	2023	2024	’22-’23		’23-’24		’22-’24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국힘→국힘	4	36,729	20,765	18,201	-15,964	-43.5%	-2,564	-12.3%	-18,528	-50.4%
민주→국힘	8	22,885	13,824	14,988	-9,061	-39.6%	1,164	8.4%	-7,897	-34.5%
소계	12	59,613	34,589	33,189	-25,024	-42.0%	-1,400	-4.0%	-26,425	-44.3%
민주→민주	4	21,661	33,909	50,132	12,248	56.5%	16,223	47.8%	28,471	131.4%
국힘→민주	1	551	495	2,102	-56	-10.1%	1,607	324.4%	1,551	281.5%
소계	5	22,212	34,404	52,234	12,192	54.9%	17,830	51.8%	30,022	135.2%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 더 세부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광역지자체장을 계속 맡은 시도는 50.4%로 더 크게 감소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뀐 8개 시도의 감소율은 34.5%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음. 광역 내 정치적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 반면 지속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 시도의 증가율은 131.4%이며,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뀐 시도는 281.5%로 늘어났음. 1개소 뿐이라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전 국민의힘 시절에 사회적경제 사업예산이 취약한 것을 지자체장이 바뀐 뒤 크게 늘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표 39 기초 지자체장 소속 정당에 따른 자체사업 예산 변화(2022~2024)

단위 : 백만원

소속 정당 (‘21→’22)	개수	2022	2023	2024	’22-’23		’23-’24		’22-’24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보수→보수	63	2,183	2,404	2,518	222	10.2%	114	4.7%	335	15.4%
진보→보수	90	15,351	9,211	7,671	-6,140	-40.0%	-1,540	-16.7%	-7,679	-50.0%
소계	153	17,533	11,615	10,190	-5,918	-33.8%	-1,426	-12.3%	-7,344	-41.9%
진보→진보	73	80,012	84,594	38,932	4,582	5.7%	-45,662	-54.0%	-41,079	-51.3%
보수→진보	0	0	0	0	0	-	0	-	0	-
소계	73	80,012	84,594	38,932	4,582	5.7%	-45,662	-54.0%	-41,079	-51.3%

* (보수)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보수당 탈당/복귀 당선자 / (진보)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진보당 탈당/복귀 당선자

- 기초 지자체장의 소속에 따른 기초지자체 사회적경제 자체사업의 예산변화는 범보수와 범진보로 나눠서 비교하였음. 그 결과 지자체장 교체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 22~23년에는 진보에서 보수로 바뀐 지자체장의 자체예산은 40.0% 감소하였음. 이후 중앙정부 예산삭감의 유발 효과라고 이해할 수 있는 24년 예산에서도 추가적으로 16.7%가 줄어들어 2개년간 50.0%가 감소하였음.
-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23년 예산은 소폭 증가했지만,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은 24년 예산은 더 큰 폭인 54.0%가 감소되었음. 중앙정부의 다양한 압박이 적극적 사업수행을 철화하게 만들었다고 봐야 할 것임.
- 물론 더불어민주당 73개 시군구의 합계가 389억원으로 국민의힘 153개 시군구의 예산 합계액 102억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8배 정도 차이가 나 절대적 예산규모의 차이는 유지되고 있음.

5. 25년 사회적경제 예산에 대한 요구

□ 25년도 정부 예산편성 지침의 문제점

- 기재부가 3월 발표한 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24년도 예산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 심각한 재정적자가 계속되는데도 코로나의 비상상황과 단순 비교하며 총지출증가율이 낮아졌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음.(3쪽)

- 포용적 경제 정책은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서 찾을 수 없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기본방향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키워드들도 구체적으로 보면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관점이거나 금융 중심 지원으로 대응하고 있어 현실적합도가 떨어짐
- 예를 들어 미래대비 경제·사회 체질 개선에서 지방시대 부문은 “광역 교통·문화 등 지역 생활환경 개선, 대학·산업·지역의 동반성장 및 민간투자 유도로 지역거점 조성”이라는 식의 구태의 연한 방침을 제시하고 있음.
- 반면 재정운용 혁신 항목에서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지속”을 위해 “모든 재정사업의 재검토와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삭감·폐지하고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출사업은 부정소급 점검 등 지출 효율화를 지속”하겠다고 명시함.
-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을 제자리로 돌리겠다는 의향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임.

□ 25년 사회적경제 예산에 대한 요구

- 앞의 지방정부 예산 분석 결과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표출되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위축시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남.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기업에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해결되지 않음. 각 영역에서 그동안 사회문제 해결의 역할을 수행해 온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기본방침을 천명하고, 관련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역할할 수 있도록 사업의 조정이 필요함.
- 국회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민과 관이 협력하여 사회적경제의 효과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조정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분석을 위한 추가 연구과제

- 이 발표자료는 시급하게 준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예산의 분류는 이뤄지지 못하여 한계가 있음. 또한 특광역시와 도, 자치구와 시군의 특징을 감안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음.
- 향후 중앙부처 예산 변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다각도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전체 예산규모 대비 사회적경제 예산, 주민 1인당 사회적경제 예산, 사회적경제기업 개소당 혹은 매출액당 사회적경제예산 비율 등 더 다양한 각도의 분석이 필요함. 이런 세부적 분석을 통해 사회적경제 사업과 예산에 대한 입체적 이해가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사업/예산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함의를 줄 것임.

6. 참고 : 광역 지자체별 부표

표 40 광역 지자체 자체 사업 사회적경제 예산 변화1 : '22년 대비 '23년 증감

단위 : 백만원

지역	2020	2021	2022	2023	2024	'22-'23		증감액 순위	소속 정당 ('21→'22)
						증감액	증감률		
경기	26,539	12,338	12,943	25,887	34,906	12,944	100.0%	1	민주→민주
인천	2,794	2,260	2,594	2,512	5,129	66	3.1%	2	민주→국힘
제주	3,139	3,600	4,467	4,045	6,822	-56	-10.1%	3	국힘→민주
광주	1,619	958	1,657	1,465	3,275	-82	-3.2%	4	민주→민주
전남	2,134	1,919	551	495	2,102	-192	-11.6%	5	민주→민주
세종	1,298	1,521	2,128	2,193	2,859	-193	-13.4%	6	민주→국힘
울산	356	1,240	1,435	1,242	1,246	-242	-35.7%	7	민주→국힘
경북	551	539	678	436	390	-285	-6.0%	8	국힘→국힘
충북	301	635	942	632	567	-310	-33.0%	9	민주→국힘
전북	942	2,788	5,075	1,990	3,965	-422	-9.4%	10	민주→민주
강원	2,295	2,121	3,011	2,580	1,840	-431	-14.3%	11	민주→국힘
부산	4,890	4,155	4,772	4,487	3,346	-816	-26.0%	12	국힘→국힘
충남	3,100	3,584	4,403	3,410	2,761	-993	-22.6%	13	민주→국힘
대구	1,159	1,536	3,136	2,319	1,305	-2,674	-51.3%	14	국힘→국힘
대전	2,989	3,195	5,217	2,543	2,054	-3,086	-60.8%	15	민주→국힘
경남	4,215	9,826	5,213	1,342	1,361	-3,871	-74.3%	16	민주→국힘
서울	38,839	35,786	23,604	11,416	11,496	-12,188	-51.6%	17	국힘→국힘
합계	97,159	88,001	81,825	68,993	85,423	-12,832	-15.7%	-	-
평균	5,715	5,177	4,813	4,058	5,025	-755	-15.7%	-	-

표 41 광역 지자체 자체 사업 사회적경제 예산 변화2 : '23년 대비 '24년 증감

단위 : 백만원

지역	2020	2021	2022	2023	2024	'23-'24		증감액 순위	소속 정당 ('21→'22)
						증감액	증감률		
경기	26,539	12,338	12,943	25,887	34,906	9,019	34.8%	1	민주→민주
전북	2,794	2,260	2,594	2,512	5,129	2,777	68.6%	2	민주→민주
광주	3,139	3,600	4,467	4,045	6,822	2,617	104.2%	3	민주→민주
대전	1,619	958	1,657	1,465	3,275	1,976	99.3%	4	민주→국힘
전남	2,134	1,919	551	495	2,102	1,811	123.6%	5	민주→민주
제주	1,298	1,521	2,128	2,193	2,859	1,607	324.4%	6	국힘→민주
인천	356	1,240	1,435	1,242	1,246	665	30.3%	7	민주→국힘
서울	551	539	678	436	390	80	0.7%	8	국힘→국힘
경남	301	635	942	632	567	19	1.4%	9	민주→국힘
세종	942	2,788	5,075	1,990	3,965	4	0.3%	10	민주→국힘
울산	2,295	2,121	3,011	2,580	1,840	-46	-10.6%	11	민주→국힘
충북	4,890	4,155	4,772	4,487	3,346	-65	-10.2%	12	민주→국힘
대구	3,100	3,584	4,403	3,410	2,761	-489	-19.2%	13	국힘→국힘
충남	1,159	1,536	3,136	2,319	1,305	-649	-19.0%	14	민주→국힘
강원	2,989	3,195	5,217	2,543	2,054	-740	-28.7%	15	민주→국힘
부산	4,215	9,826	5,213	1,342	1,361	-1,014	-43.7%	16	국힘→국힘
경북	38,839	35,786	23,604	11,416	11,496	-1,141	-25.4%	17	국힘→국힘
합계	97,159	88,001	81,825	68,993	85,423	16,430	23.8%	-	-
평균	5,715	5,177	4,813	4,058	5,025	966	23.8%	-	-

표 42 광역 지자체 자체 사업 사회적경제 예산 변화3 : '22년 대비 '24년 증감

단위 : 백만원

지역	2020	2021	2022	2023	2024	'22-'24		증감액 순위	소속 정당 ('21→'22)
						증감액	증감률		
경기	26,539	12,338	12,943	25,887	34,906	21,962	169.7%	1	민주→민주
광주	2,794	2,260	2,594	2,512	5,129	2,535	97.8%	2	민주→민주
전북	3,139	3,600	4,467	4,045	6,822	2,355	52.7%	3	민주→민주
전남	1,619	958	1,657	1,465	3,275	1,618	97.7%	4	민주→민주
제주	2,134	1,919	551	495	2,102	1,551	281.5%	5	국힘→민주
인천	1,298	1,521	2,128	2,193	2,859	731	34.3%	6	민주→국힘
세종	356	1,240	1,435	1,242	1,246	-189	-13.2%	7	민주→국힘
울산	551	539	678	436	390	-288	-42.5%	8	민주→국힘
충북	301	635	942	632	567	-375	-39.8%	9	민주→국힘
대전	942	2,788	5,075	1,990	3,965	-1,110	-21.9%	10	민주→국힘
강원	2,295	2,121	3,011	2,580	1,840	-1,171	-38.9%	11	민주→국힘
경북	4,890	4,155	4,772	4,487	3,346	-1,426	-29.9%	12	국힘→국힘
충남	3,100	3,584	4,403	3,410	2,761	-1,642	-37.3%	13	민주→국힘
부산	1,159	1,536	3,136	2,319	1,305	-1,831	-58.4%	14	국힘→국힘
대구	2,989	3,195	5,217	2,543	2,054	-3,163	-60.6%	15	국힘→국힘
경남	4,215	9,826	5,213	1,342	1,361	-3,852	-73.9%	16	민주→국힘
서울	38,839	35,786	23,604	11,416	11,496	-12,107	-51.3%	17	국힘→국힘
합계	97,159	88,001	81,825	68,993	85,423	3,597	4.4%	-	-
평균	5,715	5,177	4,813	4,058	5,025	212	4.4%	-	-

발제문 2.

사회적경제 정책전달체계의 변화와 문제점

전)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사협)살림 윤봉란 이사장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발제

“사회적경제 정책전달체계의 변화와 문제점”

윤 봉 란

(전)통합지원기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

정책전달체계의 변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 관계부처합동 2023.9



✓ [지원기관 운영 비효율]

인증, 창업지원, 교육 등 다양한 정부정책을 위탁 수행하는 민간 지원기관의 공적업무 수행 문제, 기능 중복 발생. 동일기관이 지속적으로 다수 위탁기관에 중복 선정되거나 단독 입찰 하는 등 경쟁 제한으로 인한 비효율, 서비스질 하락 등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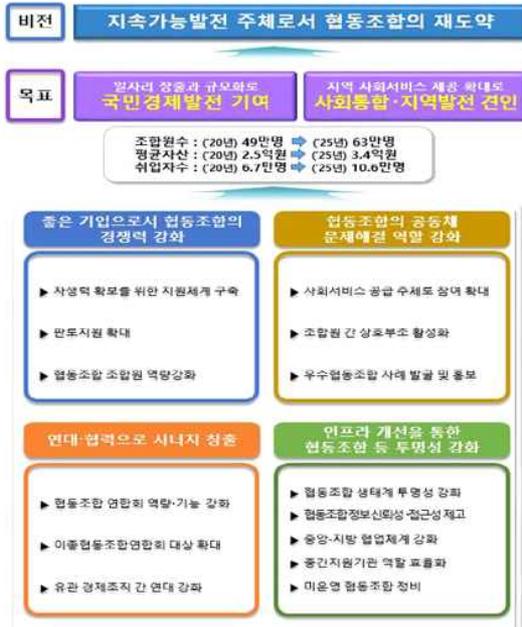
✓ [지원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전달체계 효율화)

- 중간지원기관 · 창업지원기관을 폐지하고 성장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인·지정 지원, 교육·컨설팅, 공간지원 등 각종 서비스 원스톱 제공
 - 운영방식도 변경하여 (민간위탁 → 진흥원 직접 운영) 하여 서비스의 품질 개선, 공정성·신뢰도 강화
- (사회적기업진흥원 개편) '육성'에서 '자생'으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게 사회적기업 인·지정, 사회적가치 평가, 컨설팅 중심의 지원기관으로 혁신

정책전달체계의 변화

제4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23~2025), 관계부처합동 2023.3



-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중간지원기관 간 업무가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도 발생
- ✓ 중간지원기관 선정 운영과정에서도 공정성·투명성 다소 미흡(기존기관이 다소 유리한 선정기준(수행경험, 지역자원연계 등)등으로 단독 응찰 다수 발생 등)
- ✓ 광역별(시도)단위로 중간지원기관이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나 대부분 설립위주의 지원으로 협동조합 성장지원에는 다소 한계

- [중간지원기관 역할 효율화]**
- ✓ 중간지원기관의 전문적 성장지원이 가능하도록 역량강화 : 전문기관화 유도
 - ✓ 연합회가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 중간지원기관·지원센터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 업무협의를 통해 역할 중복 해소 유도

정책전달체계의 변화

정책전달체계 변화 전과 후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전달/지원)체계

총괄부처 : 기획재정부



<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개편(안)

구분	현행		개편안	
	기능	개소	기능	개소
성장지원센터	• 초기 창업기업 대상 입주공간·교육 등 지원	19	통합성장지원센터 • (공공행정) 사회적기업 인 지정 등 • (역량강화) 센터운영·교육·컨설팅 등	5
중간지원기관	• 사회적기업 인 지정, 평가·모니터링 지원 등	16		
창업지원기관	• 창업컨설팅, 교육, 사업비 집행관리 등	25		
합계		60	합계	19

* 통합성장지원센터: 수도권, 충청, 전라, 대구, 부산권역

출처 : 정부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체계 논의자료(2018)

정책전달체계의 변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업설명회 2024.3.19

II-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개

소셜캠퍼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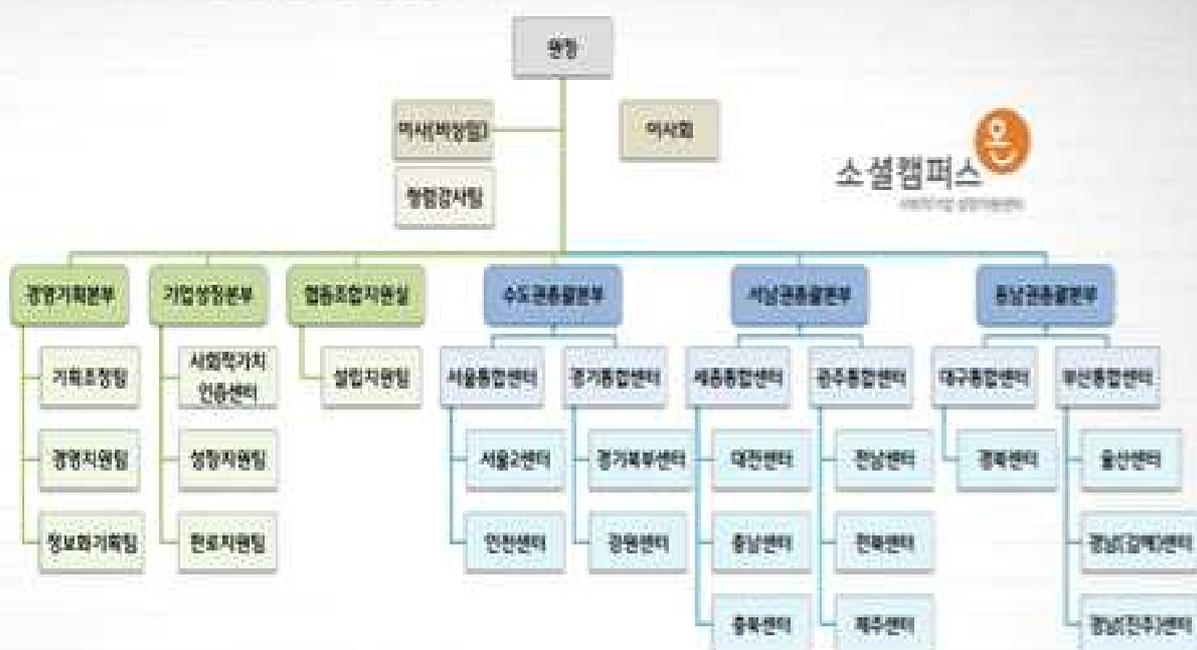
● 업무 추진 방향

비전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지원하는 협력 파트너			
목표	1.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내실화	2. 지역 중심 서비스 지원기반 구축	3.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대응체계 구축	4. 혁신을 통한 변화 대응력 강화
핵심 추진과제	1) 사회적 가치 측정 기반 구축 2) 맞춤형 성장지원 고도화 3) 협동조합 지원 내실화	1) 성장지원센터 직접 운영 2) 지역인류 공동행동 지원체계 강화 3)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1) 차세대 정보시스템 고도화 2) 차세대 디지털 판로확장을 구축	1) 변화 관리 2) 조직 혁신 3) 구성원 역량 강화

II-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개

소셜캠퍼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조직도 - 5본부 1실 7팀 6센터 (일반센터 11)



II-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개

소셜벤처스 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지역 조직별 주요 업무 - 전문연어 직접 운영 및 공공행정 중심 과업 수행

구분	센터명	①성장지원센터 운영	②공공행정 서비스	③안내 및 상담
통합센터 (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경기남부 세종 광주 부산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기업 모집/선별 입주기업 교육/멘토링 센터 시설관리 등 일반센터 통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 모니터링 사회적기업 인자형 지원 취약계층 고용비용 확인서 발급 SVI(사회적가치지표) 측정 협동조합 설립인가 장기교육 협동조합 경영공시 안내/독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제도 안내 및 기본상담
일반센터 (1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2, 인천 경기북부,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울산, 경남(강남/진주)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기업 모집/선별 입주기업 교육/멘토링 센터 시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제도 안내 및 기본상담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정책 패러다임 전면 전환

1 사회적기업 사업 개편 현장 안착

- '진흥원 직영 성장지원센터' 통한 지원서비스 직접 제공
- 공공행정(인증·SVI 측정 등) 및 교육, 컨설팅, 입주공간 등 원스톱 지원

[참고]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 (현황) 전국 광역시·도 19개소(서울·경기 2개소), 약 950여개 기업 입주 가능
- (기능) 통합센터(공공행정·성장지원, 6개소) 및 일반센터(성장지원, 13개소) 분리 운영
- (공공행정) 사회적기업 인 지정, 사업보고서 검토, SVI 측정 등
- (성장지원) 입주기업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통합센터) 서울·경기남부·세종·광주·대구·부산 (일반센터) 서울2·경기북부·강원·인천·대전·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울산·제주

- 자치단체·지방관서·성장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추진(경제협의회 등)
-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컨설팅 등은 민간전문가를 구축·활용 및 유관기관 협력

출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고용노동부 정책방향 자료 중

정책전달체계 변화 이후 문제점

<참고1: 중간지원기관 지원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항목	14	18	19	20	21	22	23
사업비	3,240	3,590	3,643	3,726	3,753	3,898	3,953
인건비	2,376	2,929	2,982	3,065	3,092	3,237	3,292
사업운영비	864	661	661	661	661	661	661
1인당연봉	220	27.1	27.6	28.3	28.6	300	305
기본법사업*	180	199	202	207	209	217	220

* 예산서상에는 인건비와 사업운영비가 구별되지 않고 사업비로만 명시되나, 진흥원 자체 지침에 따라 인건비 약 80%로 사용
* 서울과 경기지역은 타 지역 소재 기관 사업비의 2배 수준

<참고2: 중간지원기관 업무량 증가

구분	14	18	19	20	21	22
총계	6,384	8,040	9,411	10,624	11,870	11,870
인증사회적기업수	1,251	2,122	2,435	2,777	3,215	3,215
신청건수	469	372	555	519	657	657
예비사회적기업수	1,556	1,521	2,401	2,989	3,074	3,074
신청건수	-	1,243	2,331	2,211	2,349	2,349
재정지원사업지원기업수	3,577	4,397	4,575	4,858	5,581	5,581

* 총계=인증사회적기업수+예비사회적기업수+재정지원사업 지원기업수

정책전달체계 변화 이후 문제점

<참고3: 유사지원기관간 인건비비교(23년)

(단위: 백만원)

구분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협동조합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 화성시
인건비	3,292	1,770	1,322	473
지원인원	108명	51명	30명	12명
1인당 연봉	30.48	34.71	44.07	39.42

* 서울시·경기도 화성시는 '22년 기준

<참고4> 사회적기업·협동조합부문 과업 내역 비교

구분	과업내역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재정지원사업 지원, 상시상담 및 현장지원, 자율경영공시, 사업보고서, SVI 측정지원, 홍보 및 교육, 신규모델발굴 등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및 경영공시 지원, 교육 상담 컨설팅 지원, DB구축, 홍보 등

정책전달체계 변화 이후 문제점

효율화 명분으로 제거된 중간지원기관, 15년간 지역에 축적되어온 전문성 소멸과 열정과 소명의식으로 살아온 사회적경제 활동가 역할을 일시에 부정. 사회적경제 생태계 중요 축이 사라짐.

전달체계 효율화 명분으로 진행된 진흥원 중심의 정책 전달체계 작동에 문제 발생

- ✓ 인증 자격 부여 주요 이해기관인 진흥원이 기존 중간지원기관이 수행한 인증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가?
- ✓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창업과 기업 지원 전문성을 보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정부와 진흥원은 지난 10년간 중간지원기관이 요구한 역할에 따른 사업비 현실화 외면. 사업비 축소와 지원역할 역량 미확보로 기존 중간지원기관에 전문 역할을 요구하는 이상한(?) 상황 발생. 대부분 용역사업으로 해결

- ✓ 기존 지원기관의 전문성을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을 마련하라.
- ✓ 지난 10년간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 수행한다는 이유로 창업부터 사후관리까지 업무 프로세스에 무임승차 하였음
- ✓ 광역/기초단위 지원센터가 기존 지원기관의 역할을 대신할 역량 축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없었으며 현장의 정책 수요를 진흥원이나 지자체 등 공공에서 수용할 수 없는 수준

정책전달체계 변화 이후 문제점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에 그치지 않고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 제 사회적경제 정책환경 위축

- ✓ 기초-광역-중앙의 전달체계 중 광역 지원기관의 기능이 사라지며 생태계 붕괴 시작
- ✓ 광역/기초 단위 지원센터 폐지, 행정 부서 통폐합과 예산 삭감
- ✓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개칭되는 등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이 축소되고 있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 다양한 모델 발굴 및 창업 까지 위축되며 새로운 사회적경제기업 유입이 전국적으로 급감

정책전달체계 발전적 변화 방향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행정적 기술 전문성으로만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현장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발전의 숨은 조력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재 평가

정부 정책 급변은 지자체 사회적경제 정책 축소로 직결되고 있음. 책임성 있고
일관성 있는 연착륙 정책 추진

중간지원조직 비효율성 발생의 근원, 전문적인 역할 담당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
구축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변화된 현 시기에 필요한 역할로 재 셋팅. 지역기반의,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환경에서 생태계 성장을 위한 자원
연결 및 조정, 역량 강화 및 교육, 네트워크 연결, 정책제안자로서 역할 수행

중간지원조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역할 명확화. 중간지원기관 활동을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중간지원기관의 업무 수행을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으로 규정

정책전달체계 발전적 변화 과제

지역소멸 속 지역기반 시장 붕괴,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경영체의
경제활동이 이해되지 않는 경제사회 인식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런 상황에서 '육성'에서 '자생'으로 정책 전환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커뮤니티 기반의 비영리 경영체란 특성을 고려한
환경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지역기반의 생태계를 유지 회복하기 위한 지역 기반 지원체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최소한의
법제도 생태계가 마련되어, 중앙정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역할,
중앙-광역-기초단위 지원기관 권한과 역할 등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이 이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법적 근거와 기반 마련을 위해 시급히 나서야 한다.

법적 기반 마련과 동시에 정부는 지금의 사회적경제 '정책전달체계 전면 재검토를
위한, 전달체계 변화 이후 문제상황 진단과 대안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논의
테이블 운영과 정책 재설계를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

II. 현장의 목소리

탄탄협동조합 문영록 조합원(전 사회주택협회 상임이사)

(주)더공감 이경재 대표이사(예비사회적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김홍길 과장

1. 탄탄주택협동조합 활동사례



전세사기 피해 치유를 위한 탄탄주택협동조합 활동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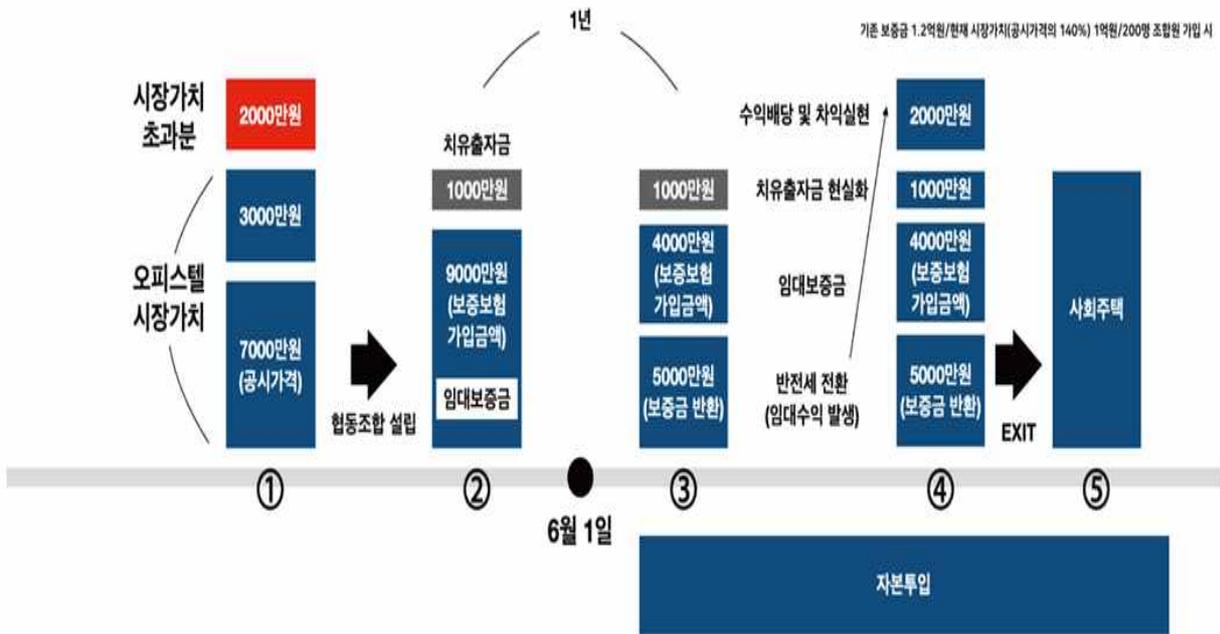
목차

1. 탄탄주택협동조합 사업구조
2. 탄탄주택협동조합 현황
3. 민간협력과 사회적경제 방식의 성과
4. 탄탄주택협동조합 출구전략
5. 제도개선 방안

별첨. 탄탄주택협동조합 주요 연혁

2

1. 탄탄주택협동조합 사업구조



- 협동조합은 설립 직후 최대 1년은 피해자들의 거주 안정성과 사업자금 확보 차원에서 '전세' 유지
- 반환 자금 확보 시점부터 반전세로 전환, 세입자에게 월세 수입을 걸어 조합에 현금흐름 생성
- 생성된 수익을 배당해 조합원들의 피해복구에 사용.

2. 탄탄주택협동조합 현황

1.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전세 피해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 및 세입자들에 대해 안정적인 주거 제공을 목적으로 함

2. 탄탄주택협동조합 현황

- 조합원 구성 : 당사자 조합원 21명, 일반조합원(창립발기인) 7명(총 28명)
- 협동조합 인수 오피스텔 : 동탄지역 21개 오피스텔 인수(인수금액 : 2,937,500,000원)
- 협동조합과 조합원 전세 계약 및 출자금 전환 : 전세보증금의 약 93.57% 보전
 - 협동조합에서 오피스텔 인수 후 시세의 90%로 조합원과 전세 계약(전세계약 : 2,487,500,000원)
 - 시세의 10% 협동조합 출자금으로 전환(당사자 조합원 출자금 : 261,160,000원)
- 입퇴거 및 반전세 전환 현황 : 2024년 7월 5일 조합원 21명의 전세보증금 치유 완료
 - 13명 퇴거 및 8명 거주자 조합원 최우선변제금(화성시 4,800만원) 이하 반전세 전환

3. 탄탄주택협동조합 자산 현황

- 2023년 재무제표 기준 오피스텔 자산가치 : 2,895,568,063원
- 반전세 전환 후 임대 보증금 1,007,000,000원, 대여금 1,120,000,000원(부채 합계 : 2,127,000,000원)
- 월 임대료 수입 : 약 7,000,000원

3. 민관협력과 사회적경제 방식의 성과

1. 행정지원 : 공공의 행정지원을 통해 탄탄주택협동조합 운영 가능
 - 탄탄주택협동조합 설립 지원(화성시, 신속 처리)
 - 탄탄주택협동조합 소유 오피스텔 등록임대주택 관리 지원(화성시)
 - 조합원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확보 연계(화성시, 화성한마음신협)
2. 후원 및 금융 지원 : (사)한국사회주택협회 및 사회적경제의 후원 및 금융 지원
 -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초기 출자금 마련, 사업 초기 금융권 후원금 활용하여 취득세 및 긴급 퇴거자 보증금 반환 운영비 등 후원, 협회 기금을 활용한 자금 지원, 다수 시민의 후원 및 기금 대여 참여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협회 기금에 매칭 기금 출연
 - 화성한마음신협 및 성남주민신협: 상생협력기금 대출
3. 피해 조합원 치유 : 당사자 조합원 21명의 보증금 반환 및 반전세 전환

5

3. 민관협력과 사회적경제 방식의 성과

4. 탄탄주택협동조합 치유 필요 조건
 - 지역적 특성: 안정적 일자리로 사회초년생 등 청년 유입으로 주택 수요가 많아 공실 우려 없고 장기적으로 자산가치 회복 예상
 - 전세피해자 특성: 청년층으로 이직, 결혼, 이사 등 주거 이동 변수가 많아 오피스텔 소유 부담
 - 물건(오피스텔) 특성: 피해 물건에 선순위 채권 없음
 - 사회적경제의 역할: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인력 투입, 전문자 자문 인프라 활용, 협회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 지원
5.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 피해 당사자가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경제모델 개발
 - 자주적, 자립적 사회적 재난 해결의 경제모델로 타 피해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사례 창출
 - 공공영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직접적인 지원을 민간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하여 해결
 -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세 피해 치유 가능
 - 전세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 보증금 때일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어 안정적 생활 가능
 - 전세 피해자 피해 복구 후 사회주택으로 운영

6

4. 탄탄주택협동조합 출구 전략

1. 공공의 이차보전 지원

- 협회, 개인, 신탁 등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 및 조합원 출자금 반환 비용 확보
[탄탄주택협동조합 수익 대비 비용 분석 사례]
- 월임대료 수입 : 700만원*12개월=8,400만원
- 이자지출 : 300만원*12개월=3,600만원
- 관리비 및 세금 지출 : 연간 약 4,000만원(중개수수료, 시설보수비, 기장료, 기타경비, 법인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등)
- 연간 순수익 : 약 800만원 수준(조합원 출자금 확보를 위해 32년 운영 필요)
- 공공의 이차보전 2% 산정 시 11.2억원*2%=2,240만원(약 8년 운영 후 조합원 출자금 적립 가능, 이후 사회주택 운영 가능)

2. 매입임대주택으로 매각

- 공공에 매각하여 부채 상환 및 조합원 출자금 확보
- 공공 매각 후 특화형임대주택으로 운영을 위탁 받아 사회주택으로 공급

7

5. 제도개선 방안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 소유를 위해 협동조합 등을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제28조의4(전세사기피해자등의 협동조합 등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동소유를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등의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
2. 소유주택 관리 지원
3. 세제 및 재정 지원
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23.11.21. 21대 국회에서 심상정의원 대표 발의한 개정안

2.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 HUG의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자격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받도록 강제 조항 신설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㉞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려고 할 때 보증회사는 가입조건에 부합할 경우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8

별첨. 탄탄주택협동조합 주요 연혁

- '23.04.30.(일) 15:00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전세피해 대책회의(동탄지역 전세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초동 회의 진행)
- '23.05.02.(화) 10:00 경기도 전세피해 대책회의 참석(행정수석 주재)
- '23.05.08.(월) 17:00 탄탄주택협동조합 설립 준비 회의
- '23.05.11.(목)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세피해 대책 기자회견
- '23.05.12.(금) 10:00 탄탄주택협동조합 창립총회 및 설립 신고
- '23.05.14.(일) 14:00 동탄 전세 피해자 대상 탄탄주택협동조합 설명회
- '23.05.19.(금) 탄탄주택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 발급
- '23.05.19.(금)~05.20.(토) 탄탄주택협동조합 가입 개별 상담
- '23.05.23.(화) 탄탄주택협동조합 법인 등기 완료
- '23.05.26.(금) 탄탄주택협동조합 사업자등록
- '23.05.30.(화)~05.31.(수) 최초 가입 18건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접수
- '23.06.21.(수) 18:00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면담
- '23.06.26.(월) 탄탄주택협동조합 주택임대사업자등록
- '23.06.29.(목) (사)한국사회주택협회로 주거복지사업 명목 5억원 후원
- '23.06.30.(금) 탄탄주택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 '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록
- '23.07.08.(토) 10:00 조합원 상견례
- '23.07.24.(월) 1호 조합원 전세 피해 회복(보증금 상환)
- '23.07.27.(목) 19:00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주재 조합원 간담회
- '23.09.25.(월) 19:00 탄탄주택협동조합 임시총회(당사자 이사 선출)
- '23.12.02.(토) 14:00 조합원 교육 및 간담회
- '24.02.22.(목) 한국주거복지포럼 주거복지우수사례 특별상 수상(LH사장상)
- '24.05.10.(금) 한국사회주택협회 DH기금 5억원 확보
- '24.05.31.(금) 화성한마음신탁 대출(4.3억원)로 조합원 보증금 반환 및 반전세 전환 자금 확보 완료
- '24.07.05.(금) 당사자 조합원 21명 전세보증금 치유 완료(13명 퇴거, 8명 최우선변제금 이하 반전세 전환)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현장의 목소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꿈꾼 어느 사회적기업가 좌절 이야기”

소셜 컨설턴트 **이 경 재**

경영지도사

소셜컨설팅 전문기업 ㈜ 더공감 대표이사

(사)충청북도사회적기업협의회 협회장

예비사회적기업 **더공감**

사회적경제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를 공감하며, 제도와 자원, 협력자와 구매자를 이음으로써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향합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꿈꾼 어느 사회적기업가 더공감

- ◆ 환경공학전공, IT기업 기술영업(특급기술자)
- ◆ 충북 청주에 소재한 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 가온에 전문인력으로 입사(2009.06.15)
- ◆ 이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활동에 감동하여 적극 참여

(경영위기) 일자리창출사업 중단(2010~2011, 50명)으로 인한 경영위기 초래

(극복과정) 사업다각화 및 고도화를 통한 사업성과 도출
신규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전문 컨설팅 사업 참여

(극복성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으로 입사하여 대표이사로 취임
돌봄사회적기업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일자리 350명, 매출 70~80억원)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충북 청주에 소재한 대형 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인 가온의 대표이사가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및 컨설팅사업에 집중할 수록 가온의 성장이 정체되고, 기업 내부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셜컨설팅 전문기업 더공감



- ◆ 돌봄서비스 전문기업인 가온 퇴사(2021.11.30, 12년 5개월 재직)
- ◆ 소셜컨설팅 전문기업 (주)더공감 창업(2022.2.14)
- ◆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2022.10.14~2025.10.13)

1. 컨설팅 사업

더공감은 **경험**을 나눕니다.

- ✓ 사회적경제기업의 상시 전문가
- ✓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감하는 전문컨설턴트
- ✓ 지역에서 언제든지 찾아가는 소셜컨설턴트



2. 교육 사업

더공감은 **지식**을 나눕니다.

- ✓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및 종사자를 위한 경영역량 강화 교육
- ✓ 중간지원조직 또는 당사자 조직과 협력한 경영입문 교육
- ✓ 경영관리, 마케팅, 사회적가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교육



3. 마케팅 대행 사업

더공감은 **이익**을 나눕니다.

- ✓ 사업개발의 시작인 사업성 검토, 시장조사, 사업전략, 홍보·마케팅 계획 등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마케팅 대행



4. 학술연구 사업

더공감은 **고민**합니다.

- ✓ 도시, 농산어촌의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용역사업 수행
- ✓ 기업, 지자체 등 고객을 위한 학술연구



5. 공유오피스 운영 사업

더공감은 **함께**합니다.

- ✓ 서비스드 오피스 형태의 프리미엄 공유오피스
- ✓ 경영컨설팅이 함께하는 공유오피스
- ✓ 프리랜서 네트워크



주식회사 더공감은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1인 기업과 프리랜서**를 위한 사회적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좌절과 새로운 고민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중단
(일자리,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경제 발굴육성 정책 대폭 축소

(특정) 인증요건 강화(예외적용축소)

통합지원기관 폐지
(소셜캠퍼스 및 지자체를 통한 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활성화를 꿈꾼 사회적기업가의 좌절과 고민

창업기 사회적기업의 성장전략 좌절
(사회적목적 실현 어려움)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타격
(비즈니스모델 수정 불가피)

(특정유형) 사회적기업 인증불가
(지역사회공헌 다형)

지원업무 부재로 인한 혼란
(현장방치→신뢰상실→생태계축소)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포기해야 합니다.”

“사회문제를 다시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새롭게 고민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지역사회공헌 다형으로 준비하던 사회적기업 인증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4년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에 따른 경기도 현황

□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23. 9. 1.)

구분	주요내용	영향
○ 지원체계 변화	· 직접지원 예산 삭감	· 인건비·사회보험료·사업개발비 삭감
○ 사회가치 측정(SVI)	· SVI 측정 의무화· 차등지원	· 현장 기업 SVI 측정지원 필요
○ 사회적기업 육성분야	·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 특화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필요
○ 전달체계 개편 (중앙부처 중간지원기관 · 창업지원기관)	· (지원기관) 폐지 → 성장지원센터로 통합 · (운영방식) 민간위탁 → 사회적경제진흥원 직접운영	· 경기도 중간지원조직에서 일부 수행 (사회적경제원, 시군지원센터 등)

« 사회적기업 주요정책 추진체계 »

구분	역할	구분	역할
중앙부처	· 정책 및 제도 총괄 · 세제 감면, 분야별 여건 조성 등	사회적기업진흥원	· SVI 측정, 인·지정, 경영컨설팅 · SVI 운영체계 구축·운영
지방자치단체	· 지역 실정 맞춤 모델 발굴·육성 · 지역특화사업, 재정지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 공공·민간자원 연계 · 사회적 투자 확대

□ 정부예산 현황

○ '24년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음

(단위 : 억원)

도영향	부처	내용	2023년	2024년	삭감율	비고
직접영향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지원	2,022	786	61.1%	· 지방자체단체 교부예산 (전년 대비 1,276억 61.1% 감소) * 경기도는 124억 삭감
	행정안전부	○ 마을기업 발굴육성	67	27	59.7%	
간접영향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79.6	7.8	90.2%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전국 공모 * 경기도 지원 예산 3억
	고용노동부	○ 지원기관 운영 예산	42.2	전액삭감	10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전국 공모 * 경기도지원 예산 19억
		○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산	411.9	46.7	88.7%	
	중소벤처기업부	○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집중 지원	25.7	전액삭감	100%	· 10개 중앙부처 추천 후 심의 선정 * 경기도 지원 예산 4억
산업통상자원부	○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210	94.4	55%	· 비수도권 사회적기업 지원	

- 경기도는 전년 대비 국비 교부액이 124억(74%) 감소하였으며,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된 예산의 영향으로 사회적경제 현장의 고용 및 성장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영향	
	국비	경기도 (수혜대상)	국비	경기도 (수혜대상)		
합 계	130,288	16,767	47,318	4,319		
사 회 적 기 업	일자리 창출	93,530	9,528 (704명)	44,623	4,087 (297명)	고용지원 407명 감소
	사회보험료	9,847	3,488 (2,253명)	-	-	4대 보험 지원 2,253명 감소
	사업개발비	14,636	2,192 (130개사)	-	-	130개사 사업개발 지원 감소
	지역특화사업	5,580	869 (27개사군)	-	-	시·군 특성에 맞는 지원이 불가
마을기업	마을기업육성	6,695	690 (39개사)	2,695	232 (14개사)	예바·신규 마을기업지원 중단

□ 2024년 시·도별 사회적경제 예산 (2024. 2월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부서	예산(본예산 기준)				비고	
		2024년	2023년	증감액	증감율		
특/ 광역시	서울	공정경제담당관	13,432	19,071	-5,639	-29.6%	
	부산	경제정책과	6,269	13,349	-7,080	-53.0%	공공일자리 제외
	대구	민생경제과	7,594	21,681	-14,087	-65.0%	
	인천	공정사회적경제과	9,772	14,872	-5,100	-34.3%	생활안정대책 제외
	광주	노동일자리정책관	12,549	14,169	-1,620	-11.4%	
	대전	일자리경제과	12,784	15,539	-2,755	-17.7%	
	울산	기업지원과	2,599	7,934	-5,335	-67.2%	
도	강원	사회적경제과	13,187	27,362	-14,175	-51.8%	
	충북	소상공인정책과	2,655	9,284	-6,629	-71.4%	
	충남	경제정책과	9,254	17,835	-8,581	-48.1%	
	전북	금융사회적경제과	12,476	19,386	-6,910	-35.6%	
	전남	사회적경제과	14,081	13,148	933	7.1%	마을공동체 제외
	경북	사회적경제민생과	11,195	23,180	-11,985	-51.7%	지역공동체 제외
	경남	사회적경제노동과	5,562	12,658	-7,096	-56.1%	공동체활성화 제외
제주	소상공인과	3,084	2,753	331	12.0%		

※ 시도 예산서의 정책사업 기준

- 사회적경제 전담부서(課 단위) 부재시 하위 단위사업으로 파악

※ 세종시 제외 : 시도 단위와 체계 다름(시군 단위 포괄)

□ 경기도 대응 현황

- 고용 영향 최소화 :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보험료 국비 예산 축소로 인한 갑작스런 고용감소를 최소화 하고자 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119.1억(72.6억(일자리창출), 46.5억(사회보험료)) 규모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대응함

- '24년도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2023년 (시군매칭 포함)	2024년 (시군매칭 포함)	도 부담	비고
총 계	17,379	17,362	5,956	2024년 본예산 기준
일자리창출 ① (균특75%, 시군25%)	12,728	5,450	-	• '24년 7월 종료 예정 (297명 지원 가능)
일자리창출 ② (도비50%, 시군50%)		7,262	3,631	• 650명 지원 규모
사회보험료 (국75%, 시군25%)	4,651 (2,241명)	4,650	2,325 (도50%)	• '23년도 지원 규모와 동일한 예산 편성

- 혁신 생태계 조성 : 삭감된 사업개발비 및 지역특화사업에 대응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도와 시·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출연금으로 총 71억(31.9억원(경기도), 39.1억원(사회적경제원))을 편성하여 지원함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2023년 (시군매칭 포함)	2024년 (시군매칭 포함)	도 부담	비고
계	2,416	7,094	5,460	
시군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	334	100	【사업개발비 삭감 대응】 • 도비 : 시군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도비 30%) • 출연금 : 초기창업패키지, 임팩트 테마별 엑셀러레이팅, R&D기반 스케일업 지원, 협동조합 성장 지원
사회적경제 초기창업패키지	-	1,720	1,720	
사회적경제 창업도약패키지	809	820	820	
R&D기반 스케일업 지원	355	1,000	1,000	
협동조합 성장지원	440	370	370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	2,000	600	【지역특화사업 삭감 대응】 • 도비 :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	812	650	650	【마을기업육성 삭감 대응】
사회적가치평가지표(SVI) 측정 컨설팅 지원	-	200	200	• 정부 SVI평가에 대응하는 측정 지원체계 마련

□ 향후계획

- '25년 중앙정부 예산 동향 파악 및 건의 사항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방문 (7.15)
- 경기도의 민생 및 사회적경제 성장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정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III. 토론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김대훈 사무총장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임세희 과장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 최상운 과장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 모색

김대훈(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제5차 및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비교와 시사점

실태조사 항목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2020년 기준, 2022년 발표)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2022 기준, 2024년 발표)	증감
설립된 협동조합	19,429개	23,892개	23% 증
운영중 협동조합	8,926개	10,976개	23% 증
조합원	493,004명	622,410명	26% 증
종사자	133,290명	189,053명	42% 증
고용	평균 5.4명	평균 6.8명(총73,992명)	26% 증
자산	평균 2억4,970만원	평균 3억4,739만원	39% 증
자본	평균 6,060만원	평균 1억1,227만원	85% 증
출자금	평균 4,763만원	평균 5,382만원	13% 증
부채	평균 1억8,460만원	평균 2억3,512만원	27% 증
매출액	평균 2억9,512만원	평균 3억7,470만원	27% 증
당기손익	평균 (-)433만원	평균 (+)118만원	흑자전환

표 46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4. 5. 17)를 토대로 필자 재구성

-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설립된 협동조합은 23,892개로 20년(19,429개)에 비해 23.0% 증가했으며, 2022년 현재 운영중인 조합은 10,976개로 2020년(8,926개) 대비 23.0% 증가
- 협동조합의 조합당 평균 자본은 1억 1,227만원, 매출액은 3억 7,470만원으로 2020년 대비 각각 5,167만원, 7,958만원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18만원으로 2020년 적자(△433만원)에서 흑자로 전환
- 조합원은 총 622,410명, 임금근로자는 73,992명으로 2020년 대비 각각 26.2%, 54.4% 증가
- 조합원들이 협동의 힘으로 만들어낸 협동조합의 자산은 2020년 2억 4,970만원에서 2022년 3억 4,739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증가
- 부채(2020년 1억8,460 -> 2022년 2억 3,512만원)도 증가했는데 자산, 자본의 증가에 비해 부채의 증가 규모가 작은 점은 고무적인 변화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의 점검

_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거버넌스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3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법 제11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는 법 제11조의 2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 관련하여 2024년(올해) 예산은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본격 실행되는 첫해의 예산이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때문에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위원회가 2024년 협동조합 예산의 대폭 감축에 대해 어떻게 심의하고 의결했는가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음.
- 이에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2023년 3월 발표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자 과거 기본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위원회의 구성, 운영현황(회의 의제, 개최 현황, 심의결과 등)을 정부에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미 임기가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명단만을 공개하였고 그 외 중요 정보(의안, 심의결과, 회의록 등)은 비공개결정을 했으며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하였음. (관련하여 이후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위원회는 협동조합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점검하는 중요한 거버넌스 체계인데 법정계획인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 후 불과 반년도 되지 않는 시점에 무용지물로 만드는 예산의 감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어떤 역할을 했는가는 반드시 점검되어야 할 사항임.
- 정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 심의절차 없이 정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예산의 감축과 그에 따른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무력화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면 이 또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후 2025년도 예산편성 과정, 국정감사 과정에서 법령에 근거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필히 점검해야 할 것임.

협동조합의 사회개발에 있어서의 기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재조명

- 양적, 외형적인 변화보다도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협동조합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개발에서 있어서의 역할일 것임.
- 이와 관련하여 2023년 7월 UN 총회에 보고된 UN 사무총장 보고서는 사회개발에 있어서의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협동조합기업의 창업과 사회적 역할을 촉진하고 있는 한국을 모범국가로 평가
- 뿐만 아니라 UN은 총회 결의안 채택을 통해 협동조합의 사회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2012년에 이어 10여년 만에 2025년을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언
- 그만큼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협동조합의 역할,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의 협동조합을 둘러싼 현실은

-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앞두고 있는 지금, 한국의 현실은 희망보다는 우려가 더 큰 것이 현실임. 2023년 3월 발표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예산의 90% 삭감(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되어 최종 삭감규모는 전년대비 80% 수준)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좌초의 위기를 맞았고 그 결과 지난 10여년간 착실하게 구축해온 협동조합의 신규 창업, 역량강화,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생태계기반, 지원인프라가 한 순간에 붕괴되었음.
- 그 결과 협동조합 당사자 뿐 아니라 일선 지자체와 행정기관(등기소 등)의 자중지란, 혼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그 여파는 중앙정부 - 광역/기초 지자체 - 산하 공공기관 - 민간(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중간지원조직,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으로 연쇄적으로 증폭되며 악화되고 있음.
-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하루 빨리 정상상태로 복구할 것인지, 어떻게 더 발전적인 체계로 진화, 발전시킬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2025년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앞둔 한국 협동조합 운동의 과제

1) 기본 방향

- 2012년 첫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기해 한국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고 그후 10년여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출현하고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의 시대를 여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었음.
-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정책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2025년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협동조합운동의 질적 발전과 성숙을 위한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임.
- 이 과정에서 기본법 협동조합과 개별법 협동조합 사이의 협력 매우 중요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그리고 지역개발과 산업 부문에서의 공동사업, 협업을 해간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함)

-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개별 협동조합기업, 연합조직, 대변조직의 인식 제고 필요, 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의 설정,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보고서, 연차보고서 등의 작성 과정에 SDGs를 적극적으로 연계
- 협동조합 섹터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개별적, 직접적으로 보상되지 않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협동조합 섹터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간접지원의 총량을 늘리는 근거
- 또한 정책금융, 사회적금융 활용에 있어 보증, 대출 심사 기준으로 사회가치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성장전략에 있어서도 중요

2) 한국 협동조합 섹터의 사회적 기여, 공헌을 통합적으로 가시화

- 협동조합 통계체계의 구축 (기본법, 개별법 협동조합을 통합적으로 인식)
-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내용, 체계를 발전시켜 협동조합의 임팩트 리포트 발간
- 협동조합에 대한 대국민 인식증진을 위한 공동활동 (기본법, 개별법 협동조합 협력)

3)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활로개척에 기여하는 주요 제도정비 추진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 및 상호성 기준과 연계한 세제정비

- (일반)협동조합의 영리법인 성격에 대한 재검토
- 기본법 협동조합의 상호성 기준의 정립
- 기본법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상의 차별, 근거법령에 따른 편차 해소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의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범위 확대
- 신용협동조합의 타법인 출자 허용
- 연합회의 회원범위 확대 : 연합회의 연합회 회원가입 허용
- 협동조합연합회가 시행하는 공제사업의 참여범위 확대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주체, 협동조합의 활로를 여는 제도정비

- 세탁업 협동조합의 공동 세탁장 산업단지 내 설치 허용
-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택시산업 관계법령 정비
-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전환 및 규제 개선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완화 등)
- 의료서비스의 질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주치의 제도 시행,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의 본격화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 강화
- 중소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정책, 금융에 대한 접근성, 포용성 제고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해소 및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제도정비

- 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노동자(직원) 조합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상의 차별 해소 (협동조합의 상호성 기준 정비와 연계)
- 총회 의사록 인증의무 제외법인에 협동조합 포함
- 전자적 방식에 의한 협동조합 총회 허용
- 조직변경 시 취득등록세 부과이슈 및 전원동의 요건의 완화
- 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에 대한 비과세 조치
- 협동조합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치
-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한 등록면허세의 면제 또는 대폭 감면

협동조합의 활로 개척에 기여하는 좋은 거버넌스 구축

- 협동조합의 활로를 여는데 중요한 과제 상시발굴 및 개선활동 추진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내실화 (상향식 의제발굴, 회의공개)
- 협동조합, 국회, 정부(진흥원)를 연계하는 삼각 협력체계 구축

4)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자조에 기반한 커먼즈, 공동의 기반을 조성

- 붕괴된 협동조합 지원체계의 대안으로 민간주도 (가칭)협동교육원 설립(부활)
- 협동조합(사회연대경제) 섹터의 연대와 협력, 혁신을 촉진할 플랫폼 구축

5) 2025년, 협동조합인들의 자조와 협동으로 만들고 시민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축제 개최

- (가칭) 2025년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 한국 준비위원회 구성 및 준비
- 주요 사업 : 한국 협동조합 임팩트 리포트 발간 (향후 주기적 발간을 위한 기준점이 되도록 체계 구성)
/ 한국 협동조합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가시화 및 PR / 학술정책 포럼 / 한국 협동조합 공동 캠페인 /
2025 세계 협동조합의 해 기념 축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임세희 과장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 최상운 과장

